

박주선 “조작파문, 특혜·조작 두 갈래”

“검찰 수사 종결된 후 특검 도입 여부 정할 것”… 추미에 “가짜뉴스 최종판이자 반민주적 작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8일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 “준용씨 특혜 의혹 사건은 두 갈래의 사건이다. 하나는 취업특혜의 부질, 또 하나는 준용씨 취업과 관련된 제보조작 사건”이라며 특혜 의혹은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수원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협정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저에게도 많은 국민들이 제보조작 사건으로 준용씨 취업특혜 사건이 덮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비리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상규명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그러하기에 그 의혹을 해결하려면 특검 도입이 맞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자칫 이 사태가 종결이 안 된 상황에서 특검을 주장하게 되면 제보 조작 사건을 덮거나 또는 꼬리자르기 식 수사(를 유도하거나), 국민의당이 난처한 상황 전환을 위한 술수로 특검을 주장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며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준용씨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 정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당론을 비대위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 주장을 두고 당내 이견이 정리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오늘 지도부에서 결론을 내렸고, 제가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더 이상 그런 개인 의견이 표출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것이 공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당원들의 도리”라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안철수 전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안 전 대표와는 이 문제에 관련해 교감한 바 없고 안 전 대표도 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는 중이라 짐작된다”며 “본인도 신변을 정리하고 가다듬고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정국에서 조작 파문으로 자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국민의당이 지금 처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거나 국민의당을 호도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자세야말로 대한민국 협치구도 자체를 파괴하는 인식과 평가”라고 반박했다.

▲추미에 “문준용 제보 조작?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

한편,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 “일부 언론은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으로 명명하지만 이것은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불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 참석해 “우리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이 대선기간 저지른 참으로 끔찍한 정치공작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과거 정권이 권력 기관을 이용해 펼친 공작이 새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에서 벌어진 것으로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은 (제보) 당시 신뢰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제보자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



‘생각 좀 하고’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송영무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발했다”며 “국민의당은 당대표인 저를 포함해 3명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그 당시에도 적반하장이지만 지금도 적반하장이긴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 일각에서 특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 “특검을 하자고 몰다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국민은 ‘최 지은 사람이 석고대죄는커녕 감사를 끌어서 하는 것

이냐고 한다”며 “대선 시기 국민을 속이기 위해 자작극을 펼친 것이다. 이는 가짜뉴스 최종판이자 공당이 해서는 안 될 반민주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당은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총동원해 조작된 증거를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용서할 수 없는 중대 선거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스

전국대학생토론회 8월 3~4일 개최

전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오는 8월 3일과 4일 양일간 순창대학교(대전시 동구 우암로)에서 제13회 전국대학생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www.debates.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4일(화) 13시부터 7월 6일(목) 18시까지이며, 선착순 120개팀(예비 24개팀 포함)만 접수받는다.

토론회 첫째 날인 8월 3일에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에 대한 주제로 예선 조별 리그를, 둘째 날인 8월 4일에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에 대한 주제로 본선 토너먼트전을 벌인다.

토론회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금상 등 입상자에게 총 1,46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참가자격, 대회 운영규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www.debates.go.kr) “공지사항”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송영무 “음주운전 경찰 매수·은폐 시도 없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음주운전 은폐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매수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도 군인의 길을 성실히 걷던 사람으로서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금품을 제공했다거나 문서 파쇄를 지시했다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멈추게 했다거나 이런 사태가 한 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방산업체 회장님이 오신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방산업에 대해서는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전 방산업계에서 국내의 좁은 방산업계 경쟁 피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데는 우리 군과 민이 다 합쳐서 그 분야를 열심히 일하는 후배가 있다면 적극 추천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다. /뉴스

김영록 “추석 전 김영란법 가액 상향 노력할 것”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 역시 단가 기준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8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농림축산 분야 및 국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최소한 단가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적용 대상에 국내 농산물은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김영란법이 생각보다 적용하기 어려워 부정청탁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는 법률이 아니다”라며 “결국 서민경제와 시장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음식점은 물론이고 농업 생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농업 종사자들은 약자인데 육성해야 할 농업인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고 있다”고 말했다.

돌아오는 추석 전에 김영란법 가액 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냐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가액 조정으로 한정한다면 추석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

최인정 도의원, ‘文 정부, 군산조선소 신속대응’ 촉구

“군산경제 바닥 상황… 대우조선 일감 몰아주기 취소·국민연금 공적기능 발휘해야”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군산조선소 도크 존치와 전북도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실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현대중공업 주식의 9.3%(지난 4월 1일 기준)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공적인 역할로 군산조선소 문제를 지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44회 도의회 정례회 긴급결의안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군산조선소 회생을 전북도민과 약속했다”면서 “군산조선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도 없고, 현대중공업도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어서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절반이상이 파산함에 따라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이어져 군산 지역경제가 바닥으로 내달고 있는 상황임을 절실히 표현한 것이다.

최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도 없이 군산조선소 폐쇄를 확정해 지역경제와 협력업체 도산, 실업자 양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4월 정부와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에 10척의 대형유조선

건조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별적인 정책결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부실기업에 13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은 것도 모자라, ‘선박 신조펀드’ 1조원을 들여 대형유조선 10척 건조를 대우조선에 몰아줬다”고 정부 결정에 분노를 표출했다.

군산조선소는 도에서 경제적 비중이 매우 큰 기업으로 관련 협력업체도 86개에 이르고, 군산수출의 19.4%와 전북수출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대우조선에 몰아준 일감 배정 계획을 중단하고,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이율러, 국민연금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기업논리가 아닌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공적역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는 “군산조선소 폐쇄는 대량실업과 협력업체 몰도산 등 지역경제가 파탄 나는 사회적 문제임을 감안할 때, 대우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공적기능이 발휘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산조선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하며 11조원의 일자리 추경까지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북은 지금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으로 군산조선소가 폐쇄로 5천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에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